



돈을 위해 생명·안전·공공성을 위협하는

박근혜의 민영화 추진을 막아내자!

철도, 가스, 의료 ...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인 친재벌 입장을 갈수록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 이런 방향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철도,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이하 사영화) 추진도 좀 더 속도를 높일 듯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진보진영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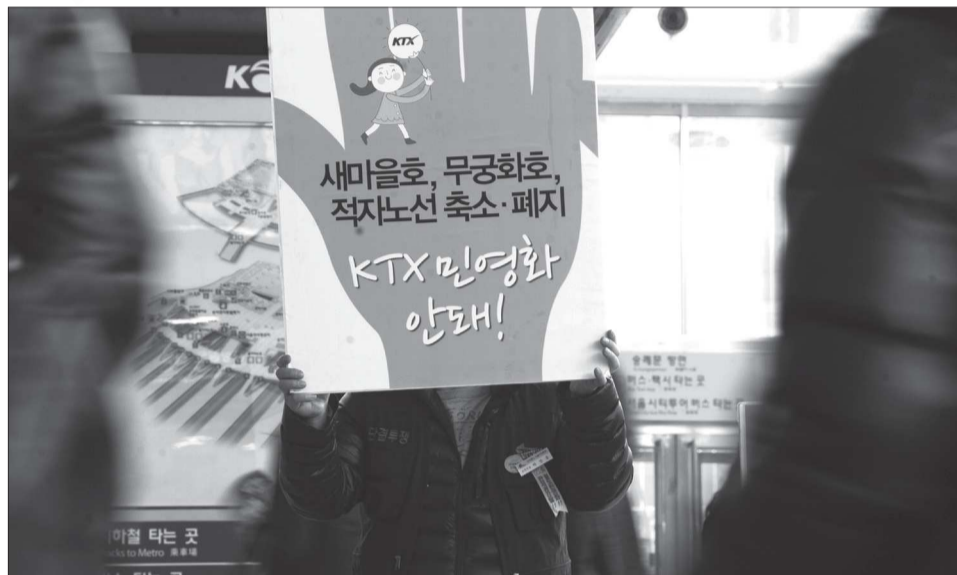
철도노조는 5월부터 지역별 농성과 전국 집중 결의대회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TX민영화저지서울지역대책위도 반대 운동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제2공사화, '민·관합동' 등이다. 정부는 광범한 사영화 반대 여론을 고려해서, 포장지는 같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듯하다.

즉, '경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고, 요금을 인상하고, 벽지 노선을 폐지하는 등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제2공사화는 그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서울메트로·도시철도 분리에서 보듯, 안전 위협, 인력 감축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고, 철도 사영화로 이어질 통로 구실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메트로가 분리되며 9호선 사영화의 토대가 마련됐고, 한국공항공사에서 분리된 인천공항은 이명박 정부 내



'제2공사화'든, '민·관합동'이든 돈벌이만 앞세운 논리와 위험은 그대로다

내 사영화 압력에 시달렸다.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들고나온 '민·관합동'은 그 자체로 사영화를 뜻한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방식인데, 공기기업의 소유나 운영에 사기업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수서발 KTX의 지분 절반 이상을 공기기업에 주거나 철도공사 관료 출신을 임원에 앉혀, '관이 주도하는 민·관합동'으로 치장할 수 있다.

돈벌이

그러나 사기업도 지분을 상당히 갖게 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수익도 보장받을 것이다. 반면 안전과 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이미 '민·관합동' 방식으로 건설한 의정

부경전철은 눈만 오면 멈춰 서, 지난 겨울에만 5차례 넘게 정차 사고를 냈다. 그때마다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아파트 5층 높이의 고공 선로"를 위태롭게 걸어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만취한 승객이 비상탈출 핸들을 건드려 전동차 18대가 한꺼번에 멈춰 서기도 했다. 이런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쟁체제 도입'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며 사기업들의 돈벌이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적자 노선 폐지, 요금 인상, 인력 감축은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무너뜨리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물론, 진보진영 전체가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요금만 올리게 될 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천연가스(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이제 대기업의 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가스를 사영화하겠다는 뜻이다.

대기업들이 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판매하면 기업들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LNG는 10~20년에 이르는 장기 계약으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LNG 수입을 늘리면 가스공사는 이미 체결한 수입량을 판매할 수 없게 돼, 계약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가스공사가 발전용·산업용 LNG를 대기업들에 빼앗기고, 겨울철에만 사용량이 크게 늘는 가정용 LNG 구입에 치중하게 되면 수입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담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반영돼, 노동자·민중에 전가될 것이다.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가스 사영화를 막아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기를 한 달가량 미루고 노동조합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협박과 회유에 못이겨 병원을 떠난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자,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4월 30일 현재 진주의료원에서 떠난 환자들 중 22명이 죽었다.

그러나 4월 2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홍준표는 "이미 희생 불능"이라며 폐업의지를 재확인했다. 홍준표가 폐업 시기를 미루기로 한 날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도 완전한 사기극이다.

홍준표가 '무상의료'를 해 주겠다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지금도 본인부담금

을 거의 안 낸다. 그런데 진짜 부담인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자며 전국의 모든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격을 주문했다. 홍준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되면 지방의료원들은 고사될 것이다. '사회 최하층' 낙인이 찍힌 병원에 누가 가려하겠는가.

폭주 기관차

홍준표는 단지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저항 능력을 꺾어먹고 대중적 복지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문제삼는 까

답이다.

복지공약 먹튀를 거듭해 온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홍준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홍준표가 성공하면 자신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영화 추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투쟁은 지속·확대돼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구조조정과 수익성 추구' 논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진주의료원을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정상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의 국회 대응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폐업에는 반대하지만, '정상화하려면 노동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는 논리를 일부 공유하기 때문이다.

홍준표가 끝내 폐원을 강행하면 '정치적 무효'를 선언하며 홍준표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공공의료를 지켜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복지 확대에 대한 열망이 높고 '경제민주화' 먹튀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있는 지금,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는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홍준표가 운전대를 잡고, 박근혜가 은근히 밀어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자.

노동강도 강화와 '주6일 근무'에 맞서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특근 거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최근 8주째 특근 거부 투쟁을 해 왔다. 지난해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4월 26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대의원 대표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특근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3월부터 강화된 노동강도가 주말 특근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게다가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주 특근을 해야 해서 주6일 노동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4월 29일에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여 이번 합의를 규탄했다. 작업을 중단하고 본관으로 이동한 노동자들은 달걀을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노동조합 사무실로 가자"는 목소리 속에 노조 사무실 앞에서도 항의가 계속됐다.

이런 불만과 분노에 힘입어서 현대차 울산 1·2·3·4·5 공장 대의원 사업부 대표들은 특근 거부 지속도 결정했다!

특근 거부 투쟁은 주간연속2교대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투쟁해 심야노동은 폐지했지만, 노동강도는 강화됐고 노동시간은 여전히 같다.



4월 29일, 잘못된 합의에 반발해 라인을 세운 현대차 울산 1공장 노동자들 이 투쟁의 전진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다른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합의로 이런 문제점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현대차 사측이 공간에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무려 33조 원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양보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수많은 하청 부품업체 노동자들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중요하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

이 어떤 조건과 내용으로 심야노동 폐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느냐에 따라 나머지 노동자들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 주말 특근을 폐지해야 온전한 주 5일 근무를 안착시킬 수 있다. 물론 특근이 폐지되더라도 임금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특근 거부 투쟁이 승리를 거두고, 이를 발판으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과의 연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시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 계획을 세웠다.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해고된 현대차 촉탁 계약직 청년 노동자의 자살,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노동자의 분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차별에 맞선 투쟁이다.

이런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특근 거부 투쟁과 서로 연결돼야 한다.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새로운 일자리 확대에 연결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확충해야 하고,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의 투쟁에 대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연대와 지지도 건설돼야 한다. 이 투쟁의 성과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상반기 노동자 투쟁의 진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한반도 긴장의 원인과 대안 Q&A

최근 긴장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세계 최강 군사력의 미국과 해마다 북한 GDP만큼 많은 돈을 군비에 쏟아붓는 남한에 긴장의 진정한 책임이 있다. 미국은 2002년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핵 선제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도 이때부터다.

최근 긴장 국면도 그 출발점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북한에 큰 압력이 됐고 호전적 맞대응을 불렀다.

왜 미국은 북한을 문제삼는가?

미국은 경제 위기와 중국의 부상 속에서 제국주의 서열 꼭대기 자리를 계속 지키려 한다. 여기서 북한은 좋은 빌미다. 즉, 미국은 북한이라는 '악마'를 힘으로 다스려 동아시아 나라들한테 자신의 패권을 각인하고, 북한 '위협'을 빌미로 이 지역의 동맹들도 단단히 묶어 둘 수 있다.

이번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가장 큰 득을 본 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이번에 이 지역을 자신의 '첨단무기 전시장'으로 만들며 동아시아 MD 구축을 한 단계 진척시켰다.

는 이번 위기에 부채질을 했다. 박근혜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하게 됐다.

한반도 위기의 요인인 한미동맹 강화에 힘써 온 박근혜는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옳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남한 노동자·민중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민중의 삶도 희생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개입하고 일본이 재무장하는 데 빌미만 되고 있다. 인민을 희생시키며 군사적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북한이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실질적인가?

당장 북한과 미국·남한 간에 국지적 충돌은 몰라도 전면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북한 '악마화'의 배경인 중·미 갈등도 단기간에 정면 충돌로 나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당장 전쟁을 벌일 여

력이 없고, 재정 적자로 군비를 줄여야 하는 처지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을 핑계 삼아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를 확고히 하려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증강을 낳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더구나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는 강대국들 사이에 경쟁과 긴장을 더 키울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이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평화 운동을 꾸준히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제국주의는 아래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때 한계를 드러냈다.

마녀사냥으로 위기 탈출하고 고통 전가하려는 박근혜

4월 29일 철도노조 내 "한길자주노동자회"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다음 날에는 청년운동단체 '소풍'의 회원들이 체포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들 중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나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는 한반도 긴장을 이용한 국가보안

법 이용 탄압으로 정권의 위기를 덮으려 한다. 또 철도 사영화 반대 등 고통전가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종북'으로 몰아 위축시키려 한다.

진보진영은 '종북' 운운하는 분열 공작에 속지 말고, 일치단결해서 마녀사냥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이 저항이 노동계급이 단결해 싸우는 계급투쟁으로 발전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을 장차 반제국주의 투쟁과 연결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문제인가?

김장수, 김관진 등 군부 출신의 대북 강경파를 외교·안보 라인 요직에 배치한 박근혜



노동자 투쟁 지지 기사가 실린 **레프트21** 103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